2차 슈퍼위크 돌입…표심잡기 치열

대장동 의혹 확산…명-낙 "적폐 청산 적임자" 자임

내달 3일 50만명 투표 결과 경선 판세 사실상 좌우

반환점을 돈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레이스의 중대 승부처로 꼽히는 2차 선거인단 투표가 29일 개시된 가운데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간 표심잡기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특히 대장동 의혹의 전선이 전방위로 확산하는 가운데 두 사람 모두 적폐 청산의 적임자를 전면에 내세웠다.

민주당은 이날부터 닷새 동안 온라인과 ARS를 통해 2차 국민·일반당원 투표를 진행하고 오는 3일 인천 순회 경선을 겸해 열리는 2차 슈퍼위크에서 결과를 발표한다.

2차 선거인단은 49만6,000여명으로, 남은 경선 일정 중 최대 규모인 만큼 이번 투표 결과가 경선 판세를 사실상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이날 SNS에 투표 독려글을 올려 "강력한 이재명 민주개혁 정부를 선택해달라"며 "여전히 검찰·언론·경제 기득권 카르텔이 건재하다. 이번 대선은 기득권 적폐세력과의 마지막 승부"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그 어떤 저항에도 굴하지 않고 두려움을 감수하며 과감히 개혁을 선택하는 용기와 추진력, 실력을 가진 사람이라야, 이재명이라야 이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개발이익 환수 법제화 토론회에 참석해 부동산 토건 비리 청산 의지를 다졌다.

2차 선거인단 투표에 결선행의 명운을 건 이 전 대표 측은 대대적인 호소전에 나섰다.

이 전 대표는 SNS에 "김대중 전 대통령은 '기적은 기적처럼 찾아오지 않는다' 고 했다. 2차 선거인단 여러분이 기적을 만들어 달라"며 "결선 투표로 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전 대표는 "날마다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고발사주 의혹에 국민은 분노한다"며 "적폐를 완전히 청산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인천 지역 공약 발표에 이어 오후 9시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라이브를 통한 투표 독려에도 나선다.

이낙연 캠프 소속 의원단 21명은 국회에서 지지호소 기자회견을 열고 "이낙연을 다시 한번 생각해달라. 청렴하고 유능한 이낙연을 민주당 후보로 선택해달라"고 밝혔다. /서울=강병운 기자

대장동 개발 진상조사 현장방문 나선 이준석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29일 오전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 진상조사를 위한 현장방문에서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조오섭 "건축현장 안전사고 외면"

지역안전센터 의무대상 설치 '40%' 불과

지난 6월 발생한 광주 학동 건축물 붕괴 참사로 건축현장 안전사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가 의무화 됐지만 관리감독에 나서야 할 국토부는 제대로 된 실태파악 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더불어민주당 조오섭(광주 북갑)의원이 국토부 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1년 7월 기준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가 의무화된 지자체는 전국 17개 광역시·도(세종 제외)를 포함해 총 40개로 이중 16개(40%) 지자체만이 설치를 완료했다.

광역시·도 가운데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울산, 세종 등 6개 광역시·도만이 설치를 완료했고 광주, 전남, 전북 등 나머지 11개 광역시·도는 아직까지 미설치 상태이다.

또 인구 50만 이상 설치가 의무화된 24개 기초단체 중에서도 서울(강남구, 노원구, 송파구, 강서구), 경기도(고양시, 화성시, 부천시, 안양시, 시흥시), 충북(청주시), 전북(전주시) 등 11개(45%)만이 설치를 완료하는데 그쳤다.

반면 인구 50만 미만 전국 203개 기초단체중 서울(21개), 경기(4개), 대전(1개), 경남(1개) 등 27개 기초단체와 세종시는 의무대상은 아니지만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해 수도권 편중현상이 나타났다.

지역건축안전센터는 지난해 12월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2022년까지 인구 50만 이상 도시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그 외 지역은 설치를 권장하고 있다.

지자체의 건축행정이 가진 한계와 문제점을 개선하고 건축인·허가 및 현장점검 등 기술적인 부분을 전문적으로 검토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하지만 설치기준이 인구 50만으로 한정 되면서 주요 광역시·도의 기초단체들은 대부분 설치 의무에서 벗어나 열악한 건축행정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데도 국토부는 이에 대한 실태파악과 지원방안 마련 등 관리감독에 소홀 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광주 동구의 경우 지방 대도시의 기초단체 이지만 인구수가 10만명 수준으로 대형참사에도 불구하고 설치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각지대로 남게될 처지다.

이와함께 건축법 시행령 제43조는 건축사, 기술사 등 전문 인력 배치를 의무화 하고 있지만 설치된 44개소의 전문인력은 건축(36명), 구조(21명), 기타(8명) 등 총 65명으로 1개소당 1.4명에 그치고 있다.

심지어 서울, 서울 중구, 인천, 대전 유성구, 경기 고양시, 경기 파주시, 경기 광주시, 경기 과천시 등 8개 지역 건축안전센터는 전문인력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 의원은 "동구 학동 참사로 건축안전 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만큼 인접한 2개 기초단체를 묶어 설치하는 방식 등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강병운 기자

의총서 언론법 강행여부 확정

민주 "방향 안 잡히면 표결"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오후 의원총회를 통해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방향을 확정 짓기로 했다.

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비공개 최고위 회의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고용진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고 수석대변인은 "만약 오늘 처리한다면 그 내용은 어느 선에서 할 수 있을지 등을 두고 논의했으나 최종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며 "의원총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되 뚜렷한 방향이 잡히지 않으면 표결할 수도 있다는 것이 최고위 결론"이라고 설명했다.

최고위는 이날 오전에도 비공개 회의를 열어 법안 단독처리 여부를 놓고 논의했으나 찬반 의견이 팽팽히 갈렸고, 이 과정에서 격론이 벌어지기도 했다.

민주당은 오후 2시 의원총회를 개최, 법안 처리 방향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연합뉴스

영세 중소기업·비수도권 인력난 심각

신정훈, 기업별 맞춤전략 시급

주력산업의 인력부족 현상이 여전하고 영세 중소기업 및 비수도권의 인력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맞춤형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기술인력에 대한 정확한 수급 현황 파악을 통한 원활한 수요-공급 기반을 마련을 목적으로 '산업기술인력 수급 실태조사'를 주관하고 있다. 바이오헬스, 자동차, 철강, 반도체, 조선 등 12대 주력산업이 조사범위에 포함되며 있으며, 산업기술인력은 전체 근로자 대비 33.9% 비중을 차지한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나주·화순)의원이 29일 산업통상자원부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 12월 집계된 2019년말 기준 12대 주력산업중 산업기술인력 현원 대비 부족률이 가장 높은 산업 부문은 소프트웨어 4%로 나타났고, 이어 화학 3.3%, 바이오헬스 3.2% 순이었다. 이 산업들은 타 산업 부문보다 지속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12대 주력산업중 바이오헬스 부문은 5년 연속 인력이 지속 증가하고 있어 성장과 고용창출의 잠재력이 있는 분야이다. 2019년 전년대비 산업기술인력 증가율이 3.1%로 12대 주력산업 중 가장 증가속도가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더욱 심각한 인력난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9년 1년 동안 사업체 에서 적극적 구인활동을 했으나 채용하지 못한 미충원 인력은 총 1만4,921명으로 전년 대비 2.8% 감소했다.

문제는 미충원인력중 82.7%인 1만2,339명이 중소규모 사업체 에서 집중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소규모 사업체 내에서도 규모가 10인~29인 사업체의 미충원인력 비중이 37.4%로 30인~99인 28%, 100인~299인 17.3% 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미충원률의 지역별 편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미충원률은 비수도권이 11.6%로 수도권 9% 보다 2.6% 높았다.

특히 전남은 무려 24.6%로 전국에서 미충원률이 가장 높았으며 경북이 22%로 그 뒤를 이었다. 즉 일자리가 있어도 상대적으로 열악한 정주 여건, 인프라 등으로 인한 구직자들의 외면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신 의원은 "기업규모별, 지역별 불균형 현상을 이대로 방치 한다면 결국 기업은 사람을 뽑지 못해 망하고 지역 일자리가 줄어들어 청년 인구의 유입이 없다면 지방소멸의 가속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면서 "정부가 각종 인력양성 사업을 진행할 때 기업규모별, 지역별 여건과 차이를 세밀하게 반영해 보다 지원이 절실한 기업과 지역에 집중,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강병운 기자

발언하는 민주당 김진표 위원장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021국가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에서 김진표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